

“헬기 기총소사 총탄 민가에도 날아들었다”

전일빌딩 인근 주민 “80년 6월 1층 벽 2.5cm 패인 자국 발견” 증언
담 높게 둘러져 있어 수평 아닌 높은 곳에서 쏜 듯... 탄환 발견은 안돼
광주대 인근 천장 구멍 증언 등 헬기사격 조사 민가 피해도 포함해야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일빌딩(옛 광주일보 사옥)과 인접한 인근 민가도 헬기 기총소사 피해를 입었다는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전일빌딩에서 계엄군의 기총소사 탄흔이 발견됐지만, 인근 민가에까지 총탄이 날아들었다는 증언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5·18 연구자들은 헬기 사격에 대한 조사가 민가까지 포함해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980년 5월 전일빌딩 뒤편에서 50여m 거리에 있는 3층 건물에 살던 김모(당시 22세)씨는 27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5·18 때 우리 집이 헬기 사격 피해를 입은 것 같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당시 논산 군수지원단 본부에서 복무하고 있었는데 6월 중순께 휴가 나와보니 형이 사무실로 쓰던 1층 벽에 타원형으로 2.5cm 가량 패인 자국(가로 15cm·세로 20cm) 1개를 발견했다”며 “분명 탄흔으로 보였으며 출입문 바로 위쪽 유리창이 깨진 점을 고려했을 때 전일빌딩이나

금남로쪽 높은 곳에서 아래로 쏜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총알이 1차 관통한 유리창은 산산조각나 있었으며, 탄환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5·18 당시 사무실 직원들이 피신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자국이 생긴 정확한 날짜는 모른다”면서도 “옛 전남도청 앞이나 금남로 상공에서 헬기가 전일빌딩을 향해 사격할 때 탄환이 날아 들어왔다는 확신이 든다”고 강조했다. 당시 집 주위로 높이 2.5m 담이 둘러져 있어 금남로나 도청 쪽 도로에서 수평으로 총알이 날아 올 수 없는 구조였고 시민군과 계엄군이 집안으로 들어온 흔적도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담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총탄이 날아왔다는 결론이다.

김씨는 “현재 집은 헐렸고 사진 등 기록도 남기지 않는 등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해 지금까지 알리지 않았다”며 “5·18 진상 규명 과정에서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는 증거가

■ 5·18 헬기 사격 추정 위치



나온 만큼 우리 건물의 피해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확신이 들어 제보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헬기 사격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시민들의 증언은 꾸준히 나왔지만 제대로 된 현황이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광주시가 지난 5월 발간한 보고서 ‘헬기 사격의 진실’에 따르면 1980년 5월 광주시 남구 광주대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서모(당시 28세)씨는 “1980년 5월24일 총소리가 들렸고 천장에 구멍이 뚫려 기왓장 등으로

하늘이 보였다”고 증언했다.

1980년 5월24일은 당시 광주대가 인접한 송암동 효천역 부근에서 11공수여단 63대와 매복 중이던 보병학교 교도대대 병력간 오인사격이 있었던 날이다. ‘2군 계엄상황일지’에는 이날 AH-1J 2대와 500MD 2대가 지상 연호를 했다는 기록이 있고 당시 인근을 지나던 주민은 보관하고 있던 탄피(길이 103mm·직경 30mm)를 지난 2월 5·18기념재단에 기증하기도 했다.

또 1995년 검찰 수사기록을 살펴보면 5월21일 오후 2시 광주경찰서(현 동부경찰서) 상공, 같은 시각 광주공원 상공, 27일 새벽 옛 도청 상공 등에서 헬기 목격담이 나왔다. 또 옛 가톨릭센터 6층, 전남대병원, 옛 광주은행 본점에서도 헬기 사격으로 추정되는 탄흔이 발견됐다.

이재의 5·18기념재단 자료위원은 “5·18 당시 시민군은 전일빌딩 옥상에 경기관총을 설치했지만 금남로나 도청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경향이 없어 발표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며 “헬기 사격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김씨의 주장은 개인성이 높다. 앞으로는 민가의 인적·물적 피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학습권 보호 귀 닫은 완도교육청 비난 빚발

중학교 옆 폐기물 처리시설
“심의 대상 아니다” 입장 고수
주민들 강력 반발 집회 성토

완도의 한 중학교 옆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는 것과 관련, 소극 대응한다는 지적을 받은 완도군교육지원청이 ‘해당 시설이 심의 대상이 아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광주일보 9월13일자 6면>

주민들이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서면 학습권 침해 등 각종 부작용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데도 완도교육청은 “관련 법상 해당 시설은 심의대상 적용 시설물이 아닌 만큼 건축허가 업무기관인 완도군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떠넘기고 있다.

27일 완도군 등에 따르면 완도교육청이 지난 12일 군외면 군외중학교에서 287m 가량 떨어진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건설 폐기물처리시설은 교육환경보호법(제8조·9조)상 상대구역인 경우에도 심의 대상이 아닌 금지행위 및 시설임을 알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군에 보냈다. 즉, 교육청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얘기다.

이번 공문은 군이 지난 5일 해당 시설

물이 들어설 경우 대형 트럭이 학교 앞 도로를 통행하면서 소음·비산먼지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크게 해칠 것으로 판단, 해당 시설물 설치 인·허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을 검토해 의견을 줄 것을 완도교육청에 요청한 것에 대한 회신이다.

완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군이 보낸 1차 공문에 대한 답변에서 ‘해당 시설은 심의대상 대상이 아니다’는 의견을 보냈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피해가 뻔히 예상되는데도 교육청이 관련법만 따지며 ‘나 몰라라’ 한다며 집회를 열고 교육청을 성토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완도교육청이 귀를 닫은 채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 A씨는 “학생들 문제인데도, 해당 교육청이 주민들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관련법만 따지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완도교육청이 학생들을 위해 최소한 도리는 지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A산업은 8월 중순 군외중학교 인근 부지(대지면적 5104㎡·건축면적 336.22㎡)에 건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완도군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원도=정은조기자·전남주재출판부장

‘5·18 숨은 영웅’ 故 안병하 경무관 11월 중 흉상 제막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故) 안병하 경무관의 추모 흉상이 오는 11월 중에 세워질 전망이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안 경무관 흉상을 오는 11월 중에 제작해 제막식을 열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흉상은 전남지방경찰청 1층 현관에 설치하며 광주 금남로에 있는 옛 전남도청 복원이 완료되면 전라남도 경찰국 건물로 이전하기로 유족 및 5·18 단체 관계자들과 협의했다. 흉상 제작은 김왕현 동시대 산업디자인학과 교수가 맡기로 했다.

안 경무관은 전남도경찰국장(현 전남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1980년 5·18 당시 시위대를 겨냥한 신군부의 강경 진압 지시와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 그는 시민 보호를 위해 경찰이 소지한 무기를 회수하고 부상당한 시민을 치료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

안 경무관은 이 일로 직위해제된 뒤 군 보안사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고,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1988년 10월 10일 사망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올해의 경찰영웅’에 안병하 경무관을 선정하고 추모 흉상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



비상용 망치·소화기 점검

광주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27일 추석연휴와 행락철을 맞아 광산구의 한 사업용 차량(전세버스) 차고지에서 교통사고나 위급 상황 발생시 사용할 비상용 망치와 소화기 등을 점검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군 복무 당시 몰래 가져온 실탄 보관한 대학생 조사

광주남부경찰은 27일 군 복무 당시 몰래 가져온 실탄을 집에 보관한 혐의(총포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학생 이모(2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께 광주시 남구 서동 자신의 원룸에 K2 소총 실탄(2발)·공포탄(2발)·예광탄(2발) 등 탄알 8발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군 복무 당시 자

신이 근무하는 부대에서 제대 기념으로 탄알을 몰래 빼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탄알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씨에게 회수한 탄알을 31사단에 넘겨줬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히말라야서 숨진 산악인 전문 등반 아니다...보험금 줘야”

히말라야 등반 중 사고로 숨진 산악인에게 전문 등반이 아니었다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보험사가 고 박모씨의 유가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유가족은 박씨가 가입한 상해사망보험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 등반 중 발생한 손해에 이는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며 거절했다. 유가족은 전문 등반을 목적으로 한 동호회 활동이 아니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여러 명이 오랜 기간 준비해 해외에서 전문 등반을 했다는 사정만

으로 전문 등반을 목적으로 한 동호회 활동이라고 선부르게 평가할 수 없다. 이 사건 원정대는 여러 산악회 소속 산악인이 일회성으로 구성된 것에 불과하고, 그 대원들이 등반 이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전문 등반을 할 예정이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또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 등반을 하던 중 발생한 사망 사고인지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이 사건에서는 면책 요건을 원고(보험사)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13년 5월 20일 김흥빈 대장을 비롯한 광주 전남 산악인 9명과 함께 세계에서 세번째로 높은 칸첸중가(8586m)를 등반한 뒤 하산하다가 해 해외에서 전문 등반을 했다는 사정만

/박진표기자lucky@

택시 운행 가로막고 출동 경찰 권총까지 빼앗으려 ‘소동’

○...광주북부경찰은 27일 택시 운행을 가로막고 출동한 경찰관의 권총까지 빼앗으려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김모(36)씨를 붙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새벽 3시20분께 광주시 북구의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택시 운행을 가로막으며 소동

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공포탄과 실탄이 장전된 경찰관의 38구경 권총을 빼앗으려 한 혐의.

○...김씨는 택시를 타고 가는 여성이 납치된 것으로 오해해 택시 진로를 가로막으며 소동을 벌였는데, 이 여성은 택시사자의 아내인 것으로 확인.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NPL과 특수물건만이 답이다.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최 선 규 H. 010-3605-5000